

광주·전남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실현 의지 있다

환경부, 친환경차 사용 권고 무시 16곳 무더기 과태료 남구·곡성·고흥·보성·장흥·진도 등 6곳 의무구매 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해 저공해차·친환경차 법적 의무 구매 비율 기준치를 채우지 못하면서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차량 중 저공

해차(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광주·전남도 등 전국 75개 지자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부문 저공해차 의무 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전체 609개(국가기관 50개, 지자체 251개, 공공기관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총 7천736대의 신규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천60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의무 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자체는 16곳이다. 광주시(81%), 전남도(80%), 영암군(90%), 영광군(75%), 강진군(66.7%), 광주 광산구(64.5%), 순천시(50%), 신안(31.8%), 광주 서구(27.3%),

해남군(13.3%), 광주 남구·곡성·고흥·보성·장흥·진도군(각 0%) 등이다. 목포시와 완도군은 지난해 구매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신규 저공해차 구매 실적을 달성한 광주·전남 지자체는 광주 북구가 125%로 가장 높았고 여수시(120%), 광주 동구·전남도교육청·광양시·장성군(100%) 등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의 누적 보유 차량 중 이산화탄소 배출원인 경유 차량이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광주시 공용차량(9월 28일 기준)

총 570대 중 경유 차량이 388대(68%)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는 42대(7%)였다. 전체 차량 중 전기차·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는 173대(23%)다. 전남도 역시 공용차량 총 202대 중 경유 차량이 162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차·하이브리드 24대, 휘발유 16대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내년에도 디젤과 가솔린 관용차 11대를 친환경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 전기화물차와 수소전기차 등 6대의 관용차를 신규 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부서별 수요에

따라 차량 구매가 이뤄지는데 되도록 친환경차 구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구매 추진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5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의무 구매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을 오는 2023년까지 100%로 상향하며 기관장 업무차량도 친환경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승지·임후성기자



5일 오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어등산 개발·금호타이어 합평 이전 우려”

김익주 시의원 시정질문

사업자 선정 문제로 지지부진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금호타이어의 '관의 이전'에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5일 시정질문에서 어등산 사업 관련 "이토록 중요한 사업이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용섭 시장의 책임

과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를 재검토하면 개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면서 "광주시, 도시공사, 민간사업자가 공동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시장은 "도시공사가 공공 개발하거나 시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재정 압박이 있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기존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호타이어의 전남 합평 및 그린산단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광주는 인구, 고용, 세수가 줄어든다. 매년 20여명의 세수가 줄어들고 출퇴근 문제로 근로자가 떠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약 영향을 우려했다. 이 시장은 3-5년 내 이전, 토지 매입 비용, 광주·전남 상생 문제를 들어 대응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기존 311종인데, 도매시장 반입 경매 전 농산물은 339종, 경매

후 및 유통 농산물은 340종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잔류 농약 다성분 시험법을 개정·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광주시는 서부농수산물검사소

와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을 비롯한 5개 구청 검사 의뢰 농산물, 로컬 푸드 등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시는 올해 들어 지난해 말까지 두 곳 검사소에서 3천540건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한 농산물은 61건(부적합률 1.7%)으로 나타났다. /이종행기자

전남자치경찰, 생활밀착 치안행정 모델 제시

출범 100일... '안전한 미래, 행복 전남' 실현 집중

출범 100일을 맞은 전남자치경찰이 그동안 어르신 안전과 교통사고·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밀착형 치안행정에 집중,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 실현 모형을 만들고 있다. 5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11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 규칙을 마련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전남경찰청 지휘·감독·보고 체계를 확립한 것을 비롯해 주요 시책 성과 평가, 경찰서장 수행평가 계획 등 6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지난 8월 도교육청과 위기청소년 비행 예방 및 보호·지원 시책 발굴 업무협약을 했다. 최근 본격 추수기를 맞아 교통사고·농축산물 절도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

를 제시하는 등 인사를 체계화했다. 경찰서장 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해 위원회 시책이 일선 현장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특히 전남자치경찰 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의결, 전남경찰청이 위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호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강진·여수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불법 개조차량 및 과적 운행 단속 강화, 교통 사망사고 다발 구역 집중 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자치경찰 임용권 행사를 위해 자치경찰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과 포상 규정을 제정해 승인 임용, 하반기 경찰서 자치경찰 사무담당 과장급 전보 인사,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에 대한 의견

해 경찰·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소위 탄력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 등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도 구성했다. 전남도에서 노인성인지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단계적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 1천350만원을 전남경찰청에 지원토록 합의하는 등 협업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시·군 주민 간담회,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치안 현장 간담회, 자치경찰 정책 공모, 도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통 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조만간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 비전 실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장세일 "골프장 갑질 방지대책 마련해야"

도의회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전남도내 골프장 갑질·배짱 영업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갑질·배짱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골프장 측의 갑질이 날로 심해지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내용

을 보면 국내 259개 회원제·대중골프장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2019년보다 9.3%p 상승했다. 문제는 골프장의 갑질과 배짱 영업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불법 운영이나 이윤료 인상 횡포에도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장세일 의원은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중제 골프장이 정책 방향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윤요금 심의위원회 구성, 잔류 농약 검사 강화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후성기자



제13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THE 13TH KJ DAILY PHOTO EXHIBITION

접수마감 **10.29**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인정

주최 광주매일신문, CE21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 x 14" (장정불요)

출품수 4점 이내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심사장소 광주에총 제2전시실

심사표비 2021년 11월 5일(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자상 www.kjdaily.com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전라남도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 부상 50만원

시상식 일시 및 장소
2021년 12월 8일(수) 오후2시 /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다목적실(예정)

작품반송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기타 사항

-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입상, 입선작은 주최측에 귀속하여 협회 또는 지회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을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어 함.
- 초대작가 16" x 20" 액자 제출, 출품시(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입요망)